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4-제5호(Vol. 34호)」

본 자료는 2024. 10. 18.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에결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 2024년 10월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 재정분야 (p2~3)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0월호	기획재정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한국지방세 연구원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4)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5)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 용인반도체 물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	강원연구원
5. 뉴스브리핑 (p6~7)	•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해 200억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행정안전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교육부
	• 군인의 자녀교육 걱정 해소!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국방부

1. 경제

출처

■ 2024년 10월 KDI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으나,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기 개선이 제약되는 모습

- ICT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제조업 생산이 일시적 조정에서 벗어나며 회복세를 지속
 - 생산설비 정비, 임금 협상 등에 따른 자동차 생산 차질이 완화되며 생산과 출하가 증가하는 등 제조업은 회복 흐름을 유지
- 그러나, 상품소비가 미약한 흐름을 지속한 가운데 건설 투자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내수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
 - 건설기성의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며, 선행지표의 누적된 부진을 감안하면 당분간 건설투자는 부진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
 - 서비스 소비의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고금리 기조로 소매 판매의 감소세는 지속
- 한편,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 2024년 10월 최근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4. 8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는 증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
 - 생산은 건설업 생산(전월비 $\Delta 1.2\%$, 전년동월비 $\Delta 9.0\%$) 감소에도, 광공업 생산(전월비 4.1% , 전년동월비 3.8%) 및 서비스업 생산(전월비 0.2% , 전년동월비 0.9%)이 증가하며 소산업 생산(전월비 1.2% , 전년동월비 1.1%) 약보합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1.7% , 전년동월비 $\Delta 1.3\%$)는 증가, 설비투자(전월비 $\Delta 5.4\%$, 전년동월비 7.8%), 및 건설투자(전월비 $\Delta 1.2\%$, 전년동월비 $\Delta 9.0\%$)는 감소
 - 소비자심리<'24.9월 CSI 100.0(전월비 $\Delta 0.8p$)> 하락, 기업심리 실적<전산업 BSI 9월 91.2(전월비 $\Delta 1.3p$)> 및 전망<전산업 BSI '24. 10월 92.6(전월대비 $\Delta 0.1p$)>은 하락
- '24.9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세 지속 둔화
 - '24.9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4.4만명 증가('24.8월 12.3만명 \rightarrow 9월 14.4만명), 실업률은 2.1%로 전년동월대비 $\Delta 0.2\%$ 하락
 - '24.9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폭 둔화('24. 8월 2.0% \rightarrow 9월 1.6%),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0%,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생활물가지수는 1.5% 상승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전반적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

2. 재정

출처

기획재정부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0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3조 원 증가한 396.7조 원임
 - 국세수입은 232.2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4조 원 감소함*
 - * 법인세 △16.8조 원, 소득세 △0.1조 원, 부가세 +7.1조 원 등
 - 세외수입은 20.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3조 원 증가했으며,
 -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0.4조 원 증가한 143.8조 원임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8월 (C)	8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8월 (H)	8월 (누계, I)	진도율 (J=I/G)	8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25.7	573.9	41.1	394.4	63.0	68.7	612.2	39.5	396.7	64.8	△1.6	2.3	1.8	△3.9
◇ 국세수입	400.5	344.1	24.0	241.6	60.3	70.2	367.3	23.4	232.2	63.2	△0.6	△9.4	2.9	△7.0
◇ 세외수입	25.0	28.5	1.9	19.3	77.1	67.6	28.2	2.1	20.6	73.0	0.2	1.3	△4.2	5.4
◇ 기금수입	200.3	201.1	15.2	133.5	66.6	66.4	216.7	14.0	143.8	66.4	△1.2	10.4	△0.3	△0.0
◇ (사보기금*)	114.6	122.3	10.7	83.4	72.8	68.2	123.8	9.6	85.9	69.4	△1.1	2.5	△3.4	1.2
◇ 세입세출 외	-	0.3	-	0.1	-	-	-	-	0.1	-	0.0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1.3조 원 증가한 447.0조 원임
 - * 건강보험가입자지원(+3.6조), 퇴직급여(+1.3조), 부모급여지급(+1.1조) 등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8월 (C)	8월 (누계D)	진도율		본예산 (G)	8월 (H)	8월 (누계, I)	진도율 (J=I/G)	8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B)	638.7	610.7	34.5	425.8	66.7	69.7	656.6	37.5	447.0	68.1	3.0	21.3	1.4	△1.6
◇ 예산	441.1	413.1	22.7	295.5	67.0	71.5	438.3	25.2	311.3	71.0	2.5	15.9	4.0	△0.5
○ 일반회계	369.4	343.5	20.5	243.6	65.9	70.9	356.5	21.4	248.9	69.8	0.9	5.3	3.9	△1.1
○ 특별회계	71.6	69.6	2.2	51.9	72.4	74.4	81.7	3.8	62.4	76.4	1.6	10.6	4.0	1.9
◇ 기금	197.7	196.5	11.8	129.7	65.6	66.0	218.4	12.3	135.5	62.0	0.5	5.8	△3.6	△4.0
◇ (사보기금*)	69.5	72.0	6.1	48.7	70.1	67.6	76.6	6.6	52.0	67.9	0.5	3.3	△2.2	0.3
◇ 세입세출 외	-	1.0	0.1	0.6	-	62.2	-	-	0.3	-	△0.1	△0.4	-	-

2. 재정

출처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필요성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지방세연구원

- 우리나라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여 2072년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연령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 이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이동 등 인구 변동 요인을 저위로 가정할 경우 1960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있음
 - 절대인구 감소보다 더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령구조가 악화된다는 점임
 - 2066년 생산연령인구 비중보다 고령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2072년 중위연령은 63.4세로 인구 10명 중 6명 이상이 63세 이상 인구로 구성되어 경제발전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지역별 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으며,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추세가 확인됨
 -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수를 기준으로 10분위로 구분하면 하위 40%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지자체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 199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와 배경을 가진 외국인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체류 및 등록 외국인,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공공서비스의 유형을 변화시키며, 서비스 공급 비용의 편차를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중위연령이 높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의료·요양, 사회복지·연금지원, 대중교통·교통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인과 다문화 가구가 증가할 경우 다국어 안내 및 통역, 문화·교육 프로그램, 법률 지원, 사회통합·적응 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일부 지역은 서비스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임

■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구분 및 행재정적 지원 확대 방안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 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나라살림 브리핑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내역을 통해 관심지역의 대응 계획과 자체 발굴 사업을 분석함
- 관심지역은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계정을 활용해 매년 1~5개 사업을 추진하며, 일부 시·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관심지역에도 투입하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종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현행 지원체계에 관심지역을 통합해야 함
- 시·군·구 단위를 넘어선 종합적 대응이 가능하게 하려면 광역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가 필요함
 - 광역 단위 비전 제시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연계와 조정 역할을 강화할 수 있음
 - 각 지역의 차별화된 경제 성장 전략 수립, 생활서비스 기능 분담 전략 수립,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인구 댐 설정 등을 담당하며, 중장기적 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음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4.9.19. 시행 '24.9.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 개발사업구역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 까지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의 전문화 및 다각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4.9.20. 시행 '24.9.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주택도시보증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행일부부터 5년으로 하던 제1종국민주택채권의 원리금 상환일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채권 발행 당시의 국채·공채의 금리와 기금의 수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구의 감소 등으로 쇠퇴하는 지역의 역량을 강화하여 도시 재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할 수 있는 대상이 도시재생을 지원할 목적으로 출자 또는 응자하는 사업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제정 '24.9.20. 시행 '24.9.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지정 해제 내용 등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함

4. 정책 및 연구

출처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재정부담 전망과 과제

(내용 요약) [바로가기](#)

국회입법조사처

-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시·도교육청 등의 교육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정부는 동 사업의 재정소요 규모를 산정하여 밝히지 않고 있음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은 12월이나 확정될 예정으로, 시·도교육청의 2025년 예산안의 제출시한이 11월까지인 점을 감안할 때 AI 디지털교과서 구독료를 비롯한 관련 사업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음
- 2025~2028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일정, 학년별 학생 수, 설정한 가격 범위 등을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부담 규모를 추계한 결과, S1-1(평균 월 구독료 5,000원+학기별 분권 구독 기간 12개월)을 적용하면 4년간 학생용 구독료로 총 4조 7,25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AI 디지털교과서의 책당 가격에 따라 총 구독료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나, 동 추계에 따른 4년간 총 구독료는 최소 시나리오(S2-2) 기준 1조 9,252억 원에서 최대 시나리오(S1-3) 기준 6조 6,15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교육부의 동 사업 재정소요 추계에 관한 국회 보고와 국회의 도입 여부·법적 성격 등에 대한 조속하고 분명한 입법정책적 결단을 전제로, 향후 자원 조달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음
 - ①교과서 비용 등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에 대한 국가의 증액교부 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또는 일몰 규정 삭제, ②디지털교육혁신수요 특별교부금 한시 특례 제도를 폐지하여 보통교부금 재원 추가 확보, ③국고 일반회계의 교육투자를 유도하여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재원 추가 확보, ④2025년 한시적으로 국가시책사업 특별교부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임

■ 용인반도체 물 사용료는 강원도에 내야

(내용 요약) [바로가기](#)

강원연구원

- 현재의 하천법에서는 하천수를 취수하는 자는 취수지점이 위치한 지자체에 허가신청을 하고 최종적으로 해당유역의 홍수통제소가 기준갈수량 기준으로 하천수 허가를 결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은 정부 주도로 하천수를 취수하여 공급하다 보니 현재의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징수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새로운 갈등을 초래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하천법을 개정하지 않고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지침을 보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즉, 정부주도로 하천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하천수 사용료를 정부가 직접 징수하여 취수지점인 상류 지역의 하천관리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임. 또한, 상류지역 지자체의 하천수 사용료 배분은 하천유역면적, 하천연장, 사림면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할 것을 제안함

5. 뉴스브리핑

출처

■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 투자 위해 200억 규모 '인구활력펀드' 조성 (내용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행안부·중기부,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 모태펀드 95억 원 공동출자해 총 200억 원 규모 벤처펀드 조성
-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중소·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로 운용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활력펀드(이하 활력펀드)'를 조성한다고 10월 7일(월) 밝힘

활력펀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45억 원, 중기부 모태펀드에서 95억 원을 각각 출자하며, 민간투자를 추가로 유치해 연내 총 200억 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임

이번에 조성되는 활력펀드는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경제적 활력이 저하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내 기업 유치를 촉진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활력펀드는 펀드 금액의 60% 이상을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과 투자 후 2년 이내 본점을 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연구소,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할 계획임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 등 고시 제정·시행으로 정책지원 대상 확대 (내용요약)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을 제정하여 10월 10일부터 시행함

그동안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을 준용하여 행정지침으로 운영해 왔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현장에서 민원 처리와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기준'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그 세부 내용과 등록절차 등의 운용 규정을 고시로 정하여 시행하게 됨

고시의 주요 내용은 행정의 예측 가능성,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의 행정지침과 큰 차이가 없으나, 농업인이 농업경영과 관련된 용자·보조금 등 정책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등록 방지를 위해 개선이 이루어짐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농업경영정보(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 정책의 수립집행과정에서 핵심이 되므로 이번 고시 시행을 통해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한편 농업경영정보의 등록과정을 체계화하고 등록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밝힘

5. 뉴스브리핑

출처

■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발표

(내용요약) [바로가기](#)

교육부

- 교육지원청 설치·운영 권한, 대폭 지방 이양
- 학교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가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9월 27일(금),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최근 교권 보호와 학교 폭력 사안 등 학교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커지고 있으며, 유보통합·교육발전특구 등 지역 단위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계획은 교육지원청이 이러한 현장의 교육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마련되었음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시도교육청이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이 바라는 교육행정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아울러, 시도교육청 조직 분석·진단을 강화하고 총액인건비를 철저히 관리하여 시도교육청의 책임감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속해서 유도할 계획임

■ 군인의 자녀교육 걱정 해소!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선정

(내용요약) [바로가기](#)

국방부

- 영천고 최종 선정, 화천고 및 포승고(2028.3.1.개교 예정) 조건부 선정
- 군인자녀들이 안정적으로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국방부(장관 김용현)와 함께 10월 15일(화)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공모 결과를 발표함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전국 단위로 군인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학교임

교육부와 국방부는 지난 3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격오지 근무와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인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함.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공모 결과, 영천고등학교(경북)가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영천고는 내년 3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2026학년도 3월부터 군인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로 본격적으로 운영됨